

증거기반 과학기술정책 관리도구의 평가에 관한 연구 : 설문조사와 FGI 비교를 중심으로

신선아*, 조성식**

제1장 서론

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과학정책 및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성이다. 우선 당위적인 측면에서 과학정책 및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계획경제 아래 소위 말하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기간의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고용 없는 성장 등 최근 들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담보적인 경제상태를 타계하고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과학정책과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와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별한 물질적 자원이 존재하지 않고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정책과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가 더욱 중요하다. 다음으로 실증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과학정책과 연구개발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연구개발예산은 그 규모가 클뿐더러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2014년 연구개발예산 규모는 세계 6위이고, GDP의 4.29%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 4).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큰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과학기술분야에도 예산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라고 하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무조건에 가까운 지지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나 이제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투자에 대한 확실한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있고,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지출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예산도 다른 분야의 예산과 함께 계속적인 경쟁을 해야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전처럼 단순히 많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그 당위성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더불어 국가 간의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시급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선진국들은 우리를 경쟁자로 인식하여 모방과 추격을 견제하고 있고 그들에 비해 적은 예산을 활용해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과학기술 정책관리 지원방

* 신선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원, 02-589-2315, sona1346@kistep.re.kr

** 조성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02-589-2937, sscho@kistep.re.kr

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증거에 기반을 둔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2장 증거기반정책 관련 연구 및 추진현황

‘증거기반(evidence-based)’이라는 용어는 의학 분야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윤건, 2012). 이후 사회복지분야, 경찰분야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용되었으며, 영국의 노동당 정부에서 ‘증거기반 정책’ 용어를 활용하면서 정책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윤영근, 2012)¹⁾. 기존의 의료방식과 달리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제를 처방하는 증거중심 의학은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처방을 내린다는 관점에서 일맥상통하다(이건, 2012). 또한 증거기반 정책은 정확한 진단과 인과적인 연결을 바탕으로 한 근대의 합리적인 문제 해결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다(Head, 2008). 증거기반 정책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지 ‘증거’만 있다고 해서 증거기반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Davies(2004)에 의하면 증거기반 정책결정은 증거 이외에 정책 담당자의 전문성, 최선의 연구증거, 정책 대상자의 특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수반한다.

증거기반 정책의 필요성으로는 ① 정책결정의 명분 제공, ② 고려 대상 정책·사업에 대한 빠른 결정, ③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에 기여, ④ 합리적 정책결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의 부응, ⑤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의 어려움 극복의 용이성 등 있으며 이러한 증거에 기반한 정책은 의견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대비된다(Gray, 1997). “의견에 기반한 정책은 증거를 선택적으로 이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untested) 개인이나 그룹의 견해에 아주 많이 의존한다.” 이러한 의견기반 정책(Opinion-Based Policy)은 세수획득의 어려움과 예산지출의 증가로 인해 과거보다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요구하는 현대의 정책 환경에 맞지 않아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로 대체되고 있다(Davies, 2004).

증거기반 정책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는 황용수 외(2008)의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지표와 측정도구의 개발에 관한 연구, 이석민(2010)의 정책평가활동 관련 연구, 윤주철(2010)의 조직관련 연구, 윤영근(2012)의 정책품질관리제도 관련 연구, 이진(2012)의 서베이방법론 역할 탐색연구, 윤건(2012)의 공공기관 개혁정책 관련 연구, 오철호(2015)의 정책과정 관련 연구가 있다.

증거기반 정책관리의 대표적인 추진 사례로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SoSP: Science of Science Policy)를 들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는 미국 과학기술정책국(OSTP) 국장 Dr. John H. Marburger에 의해 2005년에 주창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기관과 부서들은 과학정책의 투자 우선순위 결정과 투자효과성 평가를 위한 견실한 정보의 부족에 직면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의 투자규모와 국가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학기술 정책결정을 위한 사회과학 분야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과학정책의 효과성 판단을 위해서는 R&D투자와 혁신, 경쟁력, 사회적 편익을 결정짓는 요인들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1) 윤영근(2012: 2)에 의하면 토니 블레어의 영국 노동당정부가 1999년 Modernising Government라는 보고서에서 증거기반 정책(Evidence Based Policy)을 명시적으로 표방한 것을 정책분야에서의 증거기반(Evidence Based)의 시초로 보고 있다.

이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과학기술정책의 제반 활동이 전문가의 직관에 의한 단순 결정이 아닌 증거에 기반을 둔 과학적 토대 위에서 이뤄지도록 지원하였는데 크게 부처간전담기관(IWG)²⁾ 설립(2006년)과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진행방향을 결정짓는 로드맵을 발간(2008년)하고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정책활동과 미국립과학재단(NSF) SciSIP³⁾ 프로그램을 신설(2007년)하여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실무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연구지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를 통해 과학기술 투자의 최적화 및 사회적 책임성 강화 대응을 위해 객관적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이 가능해 지고 증거기반 정책업무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합리화 및 관련자의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과학기술 투자로 발생한 다양한 공공가치 측정 및 사회·경제적 평가를 아우르는 거시적 관점의 접근을 표방(SciSIP, SciREX)하고 있으며 정책 과학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구로서 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과학화 프로그램과 정보서비스는 서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책의 공공성으로 인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상이한 정치체제 반영하고 있다. ① 미국은 분권적 성격이 강한 정치체제로 독립기관인 NSF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NIH에서 정보서비스를 공동 주관하고 있다. ② 일본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로 문부과학성(MEXT)에서 주관하고 있다. ③ 유럽은 국가연합으로 EU 집행위원회 소속기관에서 정보서비스를 주관하고 있다. ④ 한국은 과학기술 주관 부처의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정보서비스(K2Base)⁴⁾를 주관하고 있다.

제3장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관점의 정책관리 지원도구인 K2Base 정보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 정책분석 기준을 적용하되 정보시스템의 특징을 동시에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⁵⁾. 효과성, 접근성, 대응성, 적정성 및 보안성의 기준에 따라 설문지법과 표적집단면접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1절 평가기준

본 연구에서는 K2Base 정보시스템을 하나의 정책 지원도구로 가정하고 평가를 실시하였다. 정보시스템은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가정은 어느 정도 합당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책분석 기준을 활용하여 평가를 시도하되, 정보시스템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정책의 분석기준은 크게 Dunn의 분석기준, Suchman의 분석기준, Nakamura와 Smallwood의 분석기준 등이 있다(권기현, 2010). 여기서는 이들 중 앞으로 우리가 분석기준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Dunn의 분석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Interagency Working Group : 美 과학기술위원회(NSTC) 사회·행태·경제과학(SBE) 분과위원회 내 설립

3) Science of Science and Innovation Policy

4) 과학기술정책통합지원서비스(K2Base: KISTEP Knowledge Base의 약자, <http://www.k2base.re.kr>)

5) 본 연구에서는 개념의 명확화를 위해 기술 개발을 통해 기능을 구현한 상태를 정보시스템으로,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과정을 정보서비스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독자들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Dunn의 분석기준은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으로 나뉘는데(권기현, 2010: 44), 실현가능성은 정보시스템의 비교·분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소망성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소망성 기준은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대응성, 적정성, 적합성 등 총 6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Dunn, 2008: 196-203). 이 중 능률성과 적합성 기준은 우리의 분석과 맞지 않아 제외시켰다.⁶⁾ 그 대신에 나머지 4가지 기준인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 적정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보시스템이란 특성으로 인해 중요한 보안성 기준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공공정보시스템 평가사례(Middleton, 2007)를 돌아보면 공공정보시스템의 경우에도 분명히 어떠한 평가범주를 통해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평가범주는 K2Base 평가기준과 어느 정도 상응하는 측면이 있다.

<전자정부 평가범주와 K2Base 평가기준의 비교>

전자정부 평가범주	K2Base 평가기준
내용(Content), 서비스(Services)	효과성
활용성(Usability)	접근성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특색(Features)	대응성
내용(Content), 서비스(Services)	적정성
보안성/프라이버시(Security/Privacy)	보안성

제2절. 평가방법

K2Base를 과학기술정책 관리도구로 바라보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지법과 표적집단면접법(FGI: 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설문지법은 응답자의 답변을 요하는 일련의 질문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1차자료 수집방법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설문지법은 융통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수집방법이다(이훈영, 2008). 설문지법은 조사의 매체에 따라 대인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등으로 구분된다.

표적집단면접법은 조사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동질집단으로 하여금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을 한 다음 토론과정을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집단 상호작용을 통하여 연구자가 정한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방법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 방법을 통해 현재까지 얻어진 계량적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심층적 정보를 도출할 수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경우 새로운 이론 구축이나 탐색연구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Krueger&Casey, 2000, 임동진, 2013). 그러나 조사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조사원의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김수정, 2015; 이훈영, 2008).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의 보완을 위해 다수의 집단면접 진행 경험을 보유한 과학기술정책 컨설팅 전문가를 면접 진행자로 초빙하여 6개 그룹(업무활용부서, 산/학/연/관, 시스템 전문가)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통합적

6) 능률성의 개념도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로 시도하려는 조사방법으로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본연구의 평가 기준에서는 제외하였다.

연구방법을 통해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세분화되고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증거기반 과학기술 정책관리 지원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제4장 분석결과

제1절 설문분석 결과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K2Base를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설문조사는 2015년 8월 24일부터 ~ 2015년 9월 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64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105명이 응답하였다(회수율: 64%). 이 중에서 무성의한 응답자 4명을 제외하여 101명을 본 연구의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66명이 KISTEP(내부사용자)이었으며, 외부사용자는 35명이었다. 외부사용자 중에서 소속기관이 연구소인 응답자는 12명, 정보시스템 전문가 9명, 대학 8명, 국회 6명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지 회수 결과>

구분	KISTEP	행정부처	국회	대학	연구소	시스템전문가	합계
조사대상자	77	25	16	17	19	10	164
유효응답자	66	0	6	8	12	9	101
회수율*	88.3%	4.0%	37.5%	47.1%	63.2%	100.0%	64.0%

응답자들의 평가 결과 1순의 선택 항목은 효과성, 접근성, 대응성, 적절성, 보안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5개 기준별 평균결과는 보안성(3.69점), 적정성(3.69점), 효과성(3.54점), 대응성(3.44점) 에서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접근성(2.79점)부문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집단을 구분하여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부사용자보다는 외부사용자가 효과성(서비스 내용 관련), 적정성, 접근성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특히 접근성의 경우 더 많은 권한에도 불구하고 내부사용자들이 낮은 평가를 하였다. KISTEP 내부에서는 주요 사용자인 예산 및 평가 관련 본부에서 적절성 항목에 낮은 평가를 하였다. K2Base 사용이 많은 그룹이 사용빈도가 낮은 그룹에 비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거의 매일’ 사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경우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제공기능 및 정보의 적정성, 대응성과 관련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효과성이 정책효과와 시스템효과로 분류되었으며 나머지 항목은 하나의 요인으로 결합되었으며, 분산분석 결과 시스템 효과성은 10%, 접근성 및 적정성은 5%, 정책 효과성, 대응성, 보안성은 1% 수준에서 기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정책효과성은 5%, 대응성과 보안성은 1% 수준에서 사용빈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설문조사결과 많은 사용자들이 K2Base라는 정책관리 지원도구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용에 능숙하고 기능에 자신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① 외부사용자뿐만 아니라 본부별로 구분되어 있는 사용권한의 확대를 통해 내부사용자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②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③ 기능개선이나 요구사항의 수렴이 보다 많은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2절 면접분석 결과

면접진행에 앞서 집단설계를 위해 K2Base 사용 대상자를 정책활용부문, 일반부문, 시스템부문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업무활용부문은 K2Base 서비스를 정책업무에 활용하는 KISTEP 내부사용자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일반부문은 외부사용자로서 사용자의 소속기관 특성에 따라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로 세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스템부문은 정보시스템의 기획 및 개발, 감리, 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영역이다. 부문별, 소속 특성(산·학·연·관) 등을 고려하여 총 6개의 수요자 집단을 설계하였다.

표적집단면접은 2016년 5월 20일부터 ~ 9월 2일까지 15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32명이 참석하였다. 40대(16명) 참가자가 가장 많았으며, 30대(12명) 그리고 50대(4명) 순이었다. 참가자들의 전공분야는 행정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경제학, 통계학, 전산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생명공학, 기상학 등으로 다양했다.

<표적집단면접 참여자 정보>

제1그룹: 정책 활용부서			제2그룹: 산업계		
참여자	소속	전공	참여자	소속	전공
김OO	기술에측실	통계학	이OO	(주)창의컨설팅	경영학
김OO	성장동력사업실	전기공학	전OO	(주)창의컨설팅	경제학
이OO	조사분석실	풍력터빈공학	류OO	한국갤럽	경영학
최OO	성과확산실	기술경제학	김OO	우린파트너스	행정학
송OO	지식정보실	지식경영학	신OO	디피라인	생명공학
김OO	R&D평가센터	생명과학			
제3그룹: 학계			제4그룹: 연구계		
참여자	소속	전공	참여자	소속	전공
이OO	연세대	행정학	성OO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행정학
현OO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	박OO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토목공학
장OO	서울시립대	경영정보학	김OO	한국정보화진흥원	행정학
이OO	서울과기대	행정학	김OO	국방기술품질원	통계학
			이OO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정보학
			최OO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항공우주
제5그룹: 관계			제6그룹: 시스템 전문가		
참여자	소속	전공	참여자	소속	전공
배OO	법제사법위원회	언론홍보학	채OO	마이크로폴리스	경영학
성OO	미래창조과학부	전자공학	진OO	오픈메이드컨설팅	데이터베이스
이OO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공학			

김OO	경찰청	전산학	배OO	KISTEP	컴퓨터공학
우OO	통계청	컴퓨터공학	김OO	퍼니웍	경영정보학
김OO	기상청	기상학	이OO	SUG	정보기술

표적집단면접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사용의 편리성(38), 제공정보의 적정성(32), 홍보수단 및 정보(20), 제공기능의 적정성(19), 메뉴의 체계성(16) 순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집단 간의 공통적 의견과 차이 의견이 존재했다. 먼저 공통적 의견으로는 ‘사용자 편리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K2Base ‘DB활용성 및 신뢰성’관련하여 출처의 명확화와 공공누리 마크 표시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또한 ‘시스템 응답속도’, ‘검색의 신속성’과 관련한 부정적 의견은 다른 항목에 비해 적은 편으로 K2Base가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집단 간 차이를 보인 의견으로는 ‘정보의 공개성’과 관련한 부분으로 모든 집단에서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공개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동일했지만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극명했다. 제1그룹(정책활용부서)의 경우 외부로의 예산정보 공개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으나 부서 간의 자료 권한체계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반면 이외 그룹의 경우 예산정보는 K2Base가 다른 과학기술정책 관련 사이트와 차별화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접근권한 확대를 통해 사용자 유입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제6그룹(시스템 전문가)과 이외 그룹 간에 K2Base 개선에 관한 접근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제6그룹의 경우 현재 K2Base 보유하고 있는 기존자료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기능 개발 및 개선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기능 위주 관점의 의견이 많았던 반면 이외 그룹의 경우에는 기존 정보와 더불어 과학기술정책 업무 및 연구 수행에 필요한 추가 또는 보완적 콘텐츠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면접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① 사용자의 편리성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아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② 정보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의견으로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일반정보는 잘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특정주제에 대한 심층정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정보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아직 많은 과학기술 전문가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체계적인 홍보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④ 민감정보를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5장 결론

최근에는 높은 연구개발투자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과가 나타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증거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과학기술 투자와 정책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증거기반 정책관리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거기반정책에 대한 이론과 연구를 살펴보고 대표적인 증거기반 정책관리라 할 수

있는 ‘과학정책의 과학화’ 관련 현황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관리 지원도구인 정보서비스 평가 관련 연구주제를 도출하였다. 즉,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분석·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인 K2Base가 합리적인 과학기술 정책관리를 얼마나 잘 지원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았다.

K2Base 사용경험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접의 비교·분석을 통해 K2Base가 핵심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두 조사 모두에서 ‘사용 편리성’과 ‘홍보수단 및 정도’와 관련한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와 결과와는 다르게 표적집단면접에서는 ‘제공 정보 및 기능의 적정성’과 관련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설문조사 대상자에 비해 사용빈도가 많은 집단이라는 특성상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층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낮은 평가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설문조사와 표적집단면접조사의 결과 비교>



통합적 연구수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K2Base가 산·학·연·관 등 여러 분야에서 증거기반의 과학기술 정책관리 지원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사용자들의 지속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K2Base가 배워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 셋째, 과학기술정책전문가라는 특정 전문가 집단을 사용자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특정시점의 심층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민감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다른 과학기술정책 서비스와 차별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K2Base 정보시스템이 증거기반 과학기술 정책관리 지원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시·적합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유일한 서비스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권기현. (2010). 『정책분석론』. 서울: 박영사.
- 김수정. (2015). 사회복지사의 노동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FGI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 17(2): 59-87.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 2014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손주연·이장재·김시정.(2015).남북과학기술협력사업 수요도출 연구: 설문조사와 FGI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기술혁신학회발표논문집」.
- 오철호. (2015). 정책결정, 증거 그리고 활용. 「한국정책학회보」. 24(1): 53-75.
- 윤건. (2012). 증거기반 공공기관 개혁정책 수행을 위한 과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 윤영근. (2012).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과 정책품질관리제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 윤주철. (2012). 증거기반정부 관점에서 본 조직개편: 조직진단을 중심으로. 「한국 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 이건. (2012). 증거기반 정책과정에서 서베이방법론의 역할 탐색.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 이석민. (2010). 정책평가제도의 변화가 증거기반의 정책관리에 미친 영향: 문헌·내용분석 연구방법 접근.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 이훈영. (2008). 이훈영교수의 연구조사방법론. 도서출판 청람. 2008.
- 황용수·장용석·김석현·성지은·조가원·양창훈·임하얀. (2008).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의 과학화와 대응과제. 「정책연구 2008-2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Davies, P. (2004). "Is Evidence-Based Government Possible?" presented at the 4th Annual Campbell Collaboration Colloquium, Washington D. C.
- Dunn, W. N. (2008), Public Policy Analysis. (5th ed). Upper Saddle River: Pearson Education, Inc.
- Gray, J.A.M. (1997), Evidence-Based Health Care: How to Make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Decision. New York and London: Churchill Livingstone.
- Head BW.(2008), Three Lenses of Evidence-Based Policy. The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67(1):1-11.
- Krueger, R. A., & Casey, M. A.(2000), Focus Group: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 Inc.
- Middleton, Michael R. (2007), Approaches to evaluation of websites for public sector services. In Kommers, Piet, Eds. Proceedings IADIS Conference on e-Society, pp. 279-284, Lisbon, Portugal